

국립현대미술관 종합감사 결과보고

가. 감사개요

■ 감사기간 : 2014. 2. 12. ~ 3. 4. (15일간)

■ 감 사 반 : 감사담당관 외 9명 (실지감사)

■ 감사내용

○ 2010년 ~ 2013년 현재까지 기관 및 소관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나. 감사결과

(단위 : 건, 천원)

기관	합 계			신분상 조치		재정상 조치		행정상 조치			
								시정	주의	개선	통보
	건수	금액	인원	건수	인원	건수	금액	건수	건수	건수	건수
국립현대미술관	14	40	-	-	-	1	40	4	5	3	2
(재)국립현대미술관 진흥재단	6	1,966				1	1,966	3	1		2
합 계	20	1,996				2	1,996	7	6	3	4

※ 첨부서류 : 감사처분 요구내용 1부.

감사처분 요구내용

(국립현대미술관)

연번	지 적 내 용	조 치 사 항
1	<p>○ 채용시험 업무 처리 및 전보 등 인사관리 부적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장이 면접위원이 아니면서 학예연구사 경력경쟁 채용 면접 시험에 참가하여 응시자에게 질문하는 등 부적절한 행위를 함 - 2012.1.1.~2014.2.28. 기간 중 합리적인 사유 없이 전보제한기간 내에 있는 소속 공무원 16명에 대하여 총 23회의 전보 실시 	<p>○ 주의 요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적절한 인사 관리를 한 관장 주의
2	<p>○ 공무원행동강령 위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행동강령」 제18조(외부강의·회의 등의 신고)에 따르면, 공무원은 대가를 받고 외부강의·회의 등을 할 때에는 행동강령책임관에 신고해야 하는데, ○○○◇◇◇◇◇◇은 사전 신고 없이 외부회의 참석 및 강의를 하여 규정 위반 	<p>○ 시정 및 주의 요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동강령 위반한 관련자(◆◆◆) 주의 조치 - 부당수령액(40천원) 환수
3	<p>○ 서울관 《소장품 특별 주제전》 외부기획자 결정 부적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 ◆◆◆◆◆(현 ○○○○○○○)이 내부 절차인 전시기획회의 논의 없이 임의로 외부기획자(◆◆◆)를 결정 <p>※ 임의로 결정된 외부기획자가 기획한 《소장품 특별 주제전》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시작품 작가 중 ◆◆◆ 출신 비율이 71.1%(38명 중 27명), ▲ 대여작품 비율이 48.4%(62점 중 30점), ▲ 대여작품의 90%(30점 중 27점)가 ◆◆◆출신 작가의 작품 	<p>○ 주의요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부기획자를 임의로 결정한 ○○○○○○○ 및 ◆◆ ‘주의’ 조치

연번	지 적 내 용	조 치 사 항
4	<p>○ 작품 수집업무 처리 부적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품수집 및 관리규정」에 따라 중장기작품수집계획(5년) 및 연간수집계획(매년)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작품 수집을 하여야 하나, 작품수집계획과 다르게 작품 구입 - 작품구입제안자의 제안서 제출 없이 심의 절차를 진행하거나, 가치평가위에서 작품수집 결정 후 사후에 제안서를 제출하는 등 작품수집 절차 미준수 - 작품제안은 내부 학예직 및 관장이 위촉하는 30인 이내의 외부제안가가 제안하도록 되어 있으나, 외부전문가의 제안 및 구입 실적이 저조하거나 전무 - ‘시적사물_현대공예전시’ 관련 작품 구입을 위해 제출한 제안서를 충분한 검토 없이 가치평가위에 상정하였으며, 가치평가위 및 수집심의위는 작품에 대한 충분한 논의 및 토론 없이 제안작품 전체를 구입하기로 결정하는 등 작품구입업무 부적정 	<p>○ 주의·개선 요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안서 검토 및 제출 없이 작품구입 절차를 진행한 관련자(◆◆) 주의 조치 - 작품수집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작품을 구입토록 하고, 외부전문가 활용방안을 강구토록 ‘개선’ 조치
5	<p>○ 서울관 관장실 등 사무공간 규정면적 초과 사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청사 사무실 사용면적은 「정부청사관리규정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배정면적을 기준하여 사용토록 되어 있으나, - 미술관 운영의 특수성을 이유로 서울관에 설치한 관장실, 단장실 등의 집무실(과천관 기설치)은 관련 규칙에서 정한 기준을 초과하여 과도한 면적을 사용하고 있고, 특히, 관장실에 화장실과 휴게실을 별도로 설치하고 있어 사무공간을 낭비하고 있어 관련규정 위반 	<p>○ 시정요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규정면적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사무공간은 규정에서 정한 배정면적기준에 맞게 조치

연번	지 적 내 용	조 치 사 항
6	<p>○ 계약 업무 처리 부적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의하면 긴급한 행사 등의 경우에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개관은 사전에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행사로 긴급한 행사로 볼 수 없음에도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전시실 로비가구 구입(2종, 58개, 79,464천원)시 수의계약 체결 	<p>○ 주의요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약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관계자(◆◆◆) ‘주의’ 조치
7	<p>○ 한전 “전기 부하율별 선택요금제” 활용 부적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전력공사 「전기공급 약관」 제67조(요금의 계산) 제7항에 따르면, 전기요금은 사용자가 유리한 요금을 적용 받을 수 있도록 사용자의 희망에 따라 부하율별 선택요금제를 선택·계약하도록 되어 있으나, - 과천관의 경우, ‘선택요금제Ⅱ’를 적용하면 전기사용료를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데도, 이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선택요금제Ⅰ’를 선택한 결과, 2011년부터 2013년까지(3년간) 총 13,619천 원의 예산 낭비 	<p>○ 시정요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기 부하율별 선택요금제를 변경하여 전기요금을 절감하도록 시정요구
8	<p>○ 서울관 전시실 등 바닥 마감공사 하자 관리 미흡</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관 「사무동 1층 로비 및 뮤즈엄샵」, 「지하 1층 로비 및 2, 3 전시실 등」의 대부분의 바닥마감 콘크리트에서 광범위하게 균열이 발생하였고, 특히 사무동 1층 로비 및 뮤즈엄샵 바닥에서는 5~10mm의 균열이 크게 발생하였음 	<p>○ 통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 안전점검 및 하자 보수대책을 마련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조치

연번	지 적 내 용	조 치 사 항
9	<p>○ 영상정보처리기기 (CCTV) 운영·관리 부적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관은 CCTV 214대가 설치되어 있으나,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개정하지 않은 채 영상정보처리기기를 담당자 임의로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 제1항에 따르면, 보유기간이 경과되면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토록 되어 있으나, 과천관 및 서울관은 녹화된 영상정보를 보관기간(90일)이 만료되었는데도 파기하지 않음 	<p>○ 개선요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상정보 보관기관 준수 및 CCTV운영관리방침을 개정토록 개선요구
10	<p>○ 작품 수집 관련 위원회 운영 및 회의록 관리 부적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품수집 및 관리규정」에 따라 구입대상 작품에 대해 가치평가위, 가격평가위, 수집심의위 등의 평가 및 심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각 위원회는 구입대상 작품에 대해 충분한 논의 및 검토 없이 작품구입을 결정하는 등 위원회를 부적정하게 운영하고 있으며, - 위원회 회의내용을 기록 관리하고 있으나, 회의록 검토 결과 작품의 소장가치와 구입 여부 결정 과정 등에 대한 논의 및 토론 내용이 누락되는 등 회의록 작성·관리를 부실하게 하고 있음. 	<p>○ 개선요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품 수집 관련 토론 및 논의를 거쳐 작품 수집이 이루어지도록 위원회 운영 방식 개선 - 작품수집 관련 중요 사항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회의록 작성·관리 철저 요구
11	<p>○ 국유재산 관리위탁 업무처리 부적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술관은 식음료 시설 및 주차장 등 재단에 관리위탁한 국유재산에 대해 사용수익에 따른 국유재산 사용료로 재산 가액의 5%를 연간 사용료로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2.5%의 요율을 적용한 사용료만 재단에게 부과함 	<p>○ 시정요구 및 통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유재산법」에서 정한 기준과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계약내용 변경방안 강구·시정 - 총수입과 총지출에 대해 매년 1년 단위로 정산

연번	지 적 내 용	조 치 사 항
12	<p>○ 후원금 모집 및 관리 부적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술관이 직접 후원사와 후원계약을 체결하는가 하면 진흥재단 이사장이 아닌 미술관 관장의 명의로 후원금 모집 - 진흥재단 출범('13.8.21.)이후 후원금 8건(1,657,474천원) 모두 규정에 따라 수입 징수결의하지 아니하고 법인 통장으로 부실하게 관리 	<p>○ 통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규정에 따라 진흥재단이 주관이 되어 후원금 모집 및 관리를 독립적으로 추진
13.	<p>○ 계약관리 부적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립현대미술관통합전산시스템 구축 등 5건을 계약방법이나 업체 선정에 위한 사전 결재도 없이 특정업체의 견적서만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검수담당자의 검수조서 확인도 없이 대금지급 하였으며, - 선금 지급 근거도 없이 선금금 190,000천원을 부적절하게 지급하였고, 국립현대미술관 통합전산 운영시스템 구축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기간이 지연되어 지체상금 사유 발생(55일, 23,760천원) 	<p>○ 시정·주의요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복수견적 없이 수의계약 진행 등으로 회계질서를 문란하게 한 관련자(◆◆◆) 주의 요구 - 국립현대미술관 통합전산시스템 구축사업(288,000천원) 관련, 지체상금 23,760천원 감액 후 지급
14.	<p>○ 국립현대미술관진흥재단 운영 관리 부적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장, 기획운영단장, 행정시설관리과장, 학예연구1실장이 이사로 참여하고 서울관 운영부장(◆◆◆)이 재단의 사소한 업무까지 결재하는 등 사실상 미술관이 재단을 운영하고 있어, 재단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훼손되어 공익법인 설립 취지가 퇴색되고 있음 - 국유재산 관리수탁자는 위탁받은 재산의 일부를 사용·수익하거나 제3자에게 사용·수익하게 하려면 국유재산법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에도 주무관청의 사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임의로 국유재산 사용·수익허가 추진 	<p>○ 통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익법인 설립 취지에 맞는 이사회 구성과 제3자에게 국유재산 사용·수익 계약을 할 경우, 주무관청의 허가 받도록 조치

연번	지 적 내 용	조 치 사 항
15.	<p>○ 국립현대미술관진흥재단 직원 특별채용 업무처리 부적정</p> <p>- 2013. 10. 7. 채용한 ●●●는 재단 인사관리규정상 디렉터 (팀장) 채용자격 기준에 미달함에도 불구하고, 디렉터로 채용</p>	<p>○ 시정요구</p> <p>- 경력을 재산정하여 보수 등에 있어 규정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p>
16	<p>○ 국립현대미술관진흥재단 직원 보수 과다지급</p> <p>- 재단 보수규정 상 신분변동 시 연봉은 임용일로부터 일할 계산토록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재단 직원(4명)을 채용함에 있어 채용한 월에 대한 임금 지급 시 일할 계산을 하지 않고 월 보수액을 전액 지급하여 총 1,956천원 과다 지급</p>	<p>○ 시정요구</p> <p>- 과다 지급한 급여 1,956천원 환수</p>